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DI 국어</b>	<b>2027학년도 특강 사회문화 3강 행정 대집행</b>	<b>OX 퀴즈 객관식</b>	<b>/ 10(개) / 11(개)</b>
--------------	--------------------------------------	----------------------	----------------------------

[1-10] 다음 글을 읽고 다음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E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문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직접 교재를 정당한 방식으로 구입한 후, 구매한 교재를 참고하여 학습해주시길 바랍니다.

1.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했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대신 행하는 제도이다.
2. 부작위 의무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로, 대체적 작위 의무와 동일하게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 법령이 있다면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4. 사법상 약정에 따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다른 수단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더라도 불이행의 방치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대집행을 할 수 없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 위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 대집행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외국의 사법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 제도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② 행정 대집행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기원을 밝히고 상반된 법적 학설을 대조하여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 ③ 행정 대집행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행정 대집행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립 요건과 절차를 설명한 후 관련된 법리적 쟁점과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7. 위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제 퇴거의 법적 근거 — 비대체적 작위 의무의 확장을 중심으로
- ② 비례의 원칙과 법치 행정 — 사법상 의무와 공법상 의무의 충돌을 중심으로
- ③ 대체적 작위 의무의 한계 — 행정 소송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 ④ 헌법과 행정법의 위계 — 불법 건축물 철거 사례를 중심으로
- ⑤ 행정 대집행의 이해 — 요건과 절차 및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8. 위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가?
- ② 대집행 실행 이후에 제기된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의무자가 승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 ③ 비상사나 위험이 절박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대집행의 절차는 무엇인가?
- ④ 개인 간의 약정에 따른 철거 의무가 행정 대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리적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9.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여 형성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작위 의무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②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의무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 ③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단계에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이행 기간을 확정하여 주어야 한다.
- ④ 법원이 게고 통지의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라도 철거된 건물의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다.
- ⑤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제삼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행정 대집행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10. 위급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건물의 철거 의무와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는 모두 제삼자가 대신 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로 분류된다.
- ② 대집행을 위한 실체적 요건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은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충족된다.
- ③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시키는 대집행의 물리적 실행 행위도 행정 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청은 계고 절차를 진행할 때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확정하여 의무자에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⑤ 행정 대집행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정답 및 해설

1. O

1문단에 따르면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직접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하게 하는 제도이다.

2. X

1문단에 따르면 부작위 의무는 대체적 작위 의무와 구별되며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X

1문단에 따르면 명령권의 근거 법이 대집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O

2문단에 따르면 약정에 따른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O

2문단에 따르면 비례의 원칙상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대집행이 용인된다.

6. ④

1문단에서 행정 대집행을 정의하고 2문단과 3문단에서 실제적 요건과 네 가지 절차를 설명하였다. 4문단에서 인도 의무와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5문단과 6문단에서 행정 소송을 통한 사법 심사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통념을 비판하거나 외국의 사법 제도와 비교하는 내용은 글에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역사적 기원을 분석하거나 상반된 학설을 대조하여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 ③ 구체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은 글의 전개 방식과 다르다.
- ⑤ 문제의 원인 분석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을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논리 구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7. ⑤

이 글은 행정 대집행의 실제적 요건과 절차를 중심 화제로 삼고 인도 의무의 대상 여부와 사법 통제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4문단에 강제 퇴거의 법적 근거가 등장하지만 비대체적 작위 의무를 확장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2문단에 사법상 의무와 공법상 의무의 차이가 등장하지만 두 의무가 충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1문단에 대체적 작위 의무가 등장하지만 그 한계를 논증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서술한 글이 아니다.
- ④ 2문단에 불법 건축물 철거 사례가 등장하지만 헌법과 행정법의

위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8. ②

5문단에 따르면 비용 납부 명령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의무자가 승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 ① 1문단에 따르면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포함된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대집행 전 의무화된 계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약정에 따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사법상 의무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

9. ①

2문단에 따르면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와 같은 부작위 의무는 위반될 경우 공작물의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며 이러한 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 1문단에 따르면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강제로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주는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계고에 해당한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대집행이 이미 실행되어 버리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철거된 건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점유 이전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④

3문단에 따르면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대집행의 네 번째 단계인 비용 징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계고에서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확정하여 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 ① 1문단에 따르면 건물의 철거와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 의무에 속하므로 적절하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비례의 원칙은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기 곤란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충족되므로 적절하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계고나 영장 통지뿐만 아니라 대집행의 실행 역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6문단에 따르면 대집행권 행사에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https://blog.naver.com/theikorean> 또는 <https://ctee.kr/place/dikorean>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 사법 심사가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다.

